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5월 03일



| 금주의 이슈 |

- I. 금융위기 수준의 '제조업 쇼크' / 3
- II.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증 / 9
- III. 도시 숲,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 13



금주의 이슈

- 금주(5월 첫째 주)는 경제·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지난 주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제조업 위기 실태를 점검했으며, 제2편에서는 2018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증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어 제3편에서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도시 숲 조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제1편 : 금융위기 수준의 '제조업 쇼크' |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
제조업 쏠분야의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되는 위기 국면임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여파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은 文정부의 親노동·분배위주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이 주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제조업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2편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증 | 김창배 연구위원 |
2018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은 실거래가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보유세의 누진구조, 종부세 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들이 부담할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특정계층에 세 부담을 집중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이른바 '국민 편가르기'식의 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참에 증세요인에 대해 지출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제3편 : 도시 숲,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 김영현 연구원 |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도시 숲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도심의 숲 현황과 지역·기업의 사례 등과, 도시 숲 조성이 미치는 기대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더불어서 관련된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 5. 3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I. 금융위기 수준의 '제조업 쇼크'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02-6288-0531

우리 경제는 제조업 쏠분야의 생산·투자가 동반 감소되는 등 위기 국면이며, 文정부의 親노동·분배위주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추진이 초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제조업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제조업부활'전략을 능가하는 제조업 성장전략의 마련과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더불어서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전면 폐기·수정이 바람직함

1. 현황: “急落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제조업”

○ 통계청 발표(4.30) '3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내용

- 全 산업생산 전월대비 1.2% 감소 ⇨ 5년前(-2.0%) 이래 가장 큰 감소폭
- 자동차(-3.7%), 기계장비(-4.3%),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의 생산 감소가 주요인
- 팔리지 않고 공장에 쌓이는 제조업재고는 전월比 1.2%, 전년동월比 10.4% 증가
- 설비투자(-7.8%)와 건설기성(-4.5%)도 감소세로 전환
- 기계류(-11.6%)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요인

○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되는 등 제조업 쏠분야에서 총체적 위기 국면

- 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제조업 재고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설비투자 역시 5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주력 제조업이 위기에 처함

중공업생산 및 설비투자 변동 추이

	중공업생산		설비투자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7. 3	1.2	4.2	10.1	23.6
2017.12	-0.6	-0.8	6.0	2.5
2018. 1	1.0	4.2	5.4	21.5
2	-0.2	-1.2	1.1	9.4
3	-1.2	-1.0	-7.8	-0.2

출처: 통계청 '2018년3월 산업활동동향.'

2. 제조업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 진단

-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여파 및 국내외 여건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
 - “구조조정 여파가 자동차와 기계투자 등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제조업 지표 부진의 주원인”이지만, “세계경제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 및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에 따른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기획재정부)
- 하지만, 文정부 출범 이후 親노동·분배위주 정책추진이 제조업을 포함한 주력산업 경쟁력 급락의 핵심 원인
 - 최저임금의 급속인상, 부가증세(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제조업의 경쟁력저하를 초래
 -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규모 제조기업까지 이러한 非시장적 정책기조에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주요 경쟁국들에서의 ‘제조업 부활’ 도 우리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
 - 우리와는 달리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부활’을 통해 자국산업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추세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제조업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3.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부활' 전략

○ 미국

-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조업 부활전략' 추진
 - 2014년 「일자리재유치법(Bring Jobs Home Act)」 제정 추진과 동시에, 주정부 및 각 시정부 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책 추진
 - 2기 대선공약으로 표명한 '제조업분야 고용 100만명 창출' 관련 정책 추진
-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적극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 이른바 '미국우선주의'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의무 등 강제적 정책수단과 더불어 법인세율 대폭 인하(35%→21%) 등 파격적 세제혜택과 파격적 규제철폐를 통해 제조기업의 국내 회귀(reshoring)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유도

○ 일본

- 2013년부터 '일본再興전략'을 통해 첨단 설비투자 활성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조업 부흥을 추진
 - 경제 불황 해소를 위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법 시행후 민간설비투자 증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강화,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가시적 성과
- 그 결과 2012년 0.1% 성장에 그쳤던 자국 제조업이 2015년에는 6.7% 성장하며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

○ 독일

- 'Industrie 4.0' 도입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특히 주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
 -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Industrie 4.0' 정책 추진으로 자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2020년까지 총 1530억유로(약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
 - ※ Industrie 4.0이란 제조업의 생산공정, 물류, 노동자, 서플라이어, 고객 등을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종합적인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노력을 의미

○ 중국

- 중국정부는 2015년 5월 향후 10년간 제조업 전략의 기본축이 될 새로운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 발표 (중국 국무원)
 - 업종별 육성 대신 전 산업 공동의 체질 개선과 혁신 추구
 - 제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①혁신능력 제고, ②품질제고, ③제조업과 정보화 결합, ④녹색성장 등 4개 분야 목표 제시
-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혁신전략의 기본 축이 될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우리 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4. 시사점 및 정책적 대응 방안

- ‘3월의 제조업 쇼크’의 높은 지속가능성이 더 큰 문제
 - 5월 1일 字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수출통계에 따르면, 17개월 연속 증가해 오던 우리의 수출이 하락세로 反轉
 - 작년 동기比 수출이 1.5% 감소한 반면 수입은 14.5% 증가
 -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권에서의 제조업 부활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록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제조업계에는 더 큰 타격
 - 선진국의 ‘제조업부활’ 전략을 뛰어넘는 제조업 성장 전략 마련 및 강력한 추진해야 함
 - 반도체發 통계착시 현상에서 벗어나 주력 제조업의 체질강화 대책 시급
 - 新산업육성 전략 마련·추진 급선무 (정밀기계, 바이오, AI 등)
 - 新사업 추진 및 기업유턴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정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산업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함
 -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야 함
 -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文정부 최대 공약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
-

- 지속성장의 근본을 붕괴시킬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기초한 제반 정책은 조속히 폐기 내지 수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인상,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등 글로벌 트렌드에 反하는 정책들을 再검토·무효화할 필요
 - 최저임금 문제는 文정부의 ‘시급1만원’공약 철회·완화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며,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투자-고용-성장-소득재분배라는 선순환 구조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규제는 시장여건과 선진국의 운용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
 - 국가재정을 통한 공무원 일자리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등 막대한 부작용이 불가피 하며, 대신 기업활동의 자유화를 통한 민간고용의 창출 확대가 바람직

II.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증

작성: 김창배 연구위원 ☎02-6288-0534

2018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은 실거래가 증가율 둔화(3.5% → 2.6%)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4.4% → 5.0%). 보유세 누진구조, 종부세 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 큰 폭 증가 불가피. 종부세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게도 상향된 종부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특정계층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는 소위 ‘국민 편가르기’식의 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음. 증세요인에 대해 지출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II.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증

1. 2018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5% 상승

○ 2018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5% 상승

- 서울은 10.19% 상승, 2007년(28.4%) 이후 11년 만에 최대
 - 시·군·구별로는 송파(16.1%)·강남(13.7%)·서초(12.7%) 등 서울 강남 3구가 전국 1~3위를 차지
- 고가 주택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공시가격 상승폭
 - 3~6억 공동주택은 6.91%, 6~9억은 12.68%, 9억 초과는 14.26% 상승
 - 2~3억 공동주택은 3.86%, 1~2억은 1.99%, 5천~1억은 1.21% 상승에 그침
- 중대형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
 - 85~102㎡ 공동주택은 6.54% 상승한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침

○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우려¹⁾

1) 공시가격은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

2. '2018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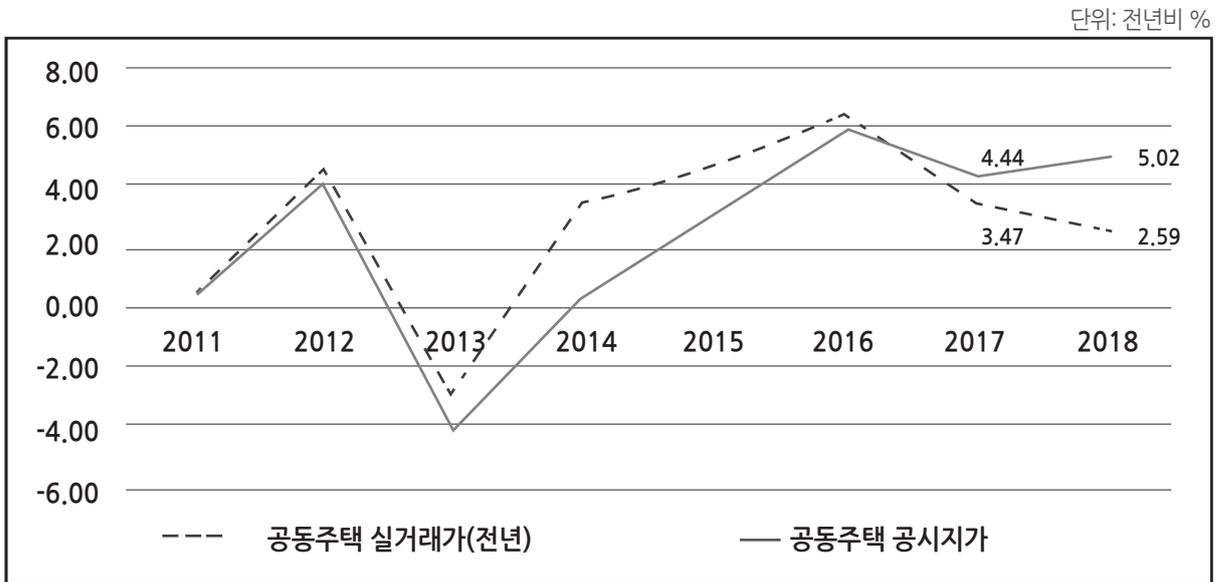
○ 거꾸로 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실거래가 증가율은 둔화되었는데 오히려 공시가격 상승률은 증가했으며 더구나 실거래가격(2017년) 상승률보다 배(倍)로 상승
 - 공동주택 실거래가 상승률: 3.47%(2016년) → 2.59%(2017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4.44%(2017년) → 5.02%(2018년)

○ 공시가격 상승으로 약 5~8만 가구(전국)가 종부세 대상으로 신규 편입

- 9억원 초과(호): 92,192(2017) → 140,807(2018): 52.7%(48,615) 증가
- 6억원 초과(호): 288,454(2017) → 366,771(2018): 27.2%(78,317) 증가
 - ※ '공시가격 9억원'은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이며 '공시가격 6억원'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준

〈그림 1〉 공동주택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변동율



○ 이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 큰 폭 증가

- 공시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보유세 증가(보유세 누진구조 때문)
 - (사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전용 31㎡) : 공시가격은 17.8% 오르지만 보유세는 19.7% 상승
- 종부세 대상이 되면 보유세 부담은 50%(연간 증세 상한선)까지 증가

- (사례)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전용 84㎡) : 공시가격은 22.1% 상승했지만 종부세 구간에 속하면서 보유세는 49.5%나 상승
-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으로 유지할 경우, 전국적으로 2018년 종부세 세부담은 2017년 대비 대략적으로 약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²⁾

<표 1>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 변화(예시)

지역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단지	잠실엘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4.8	32.0
2017년 공시가격(백만원)	808.0	191.0
2018년 공시가격(백만원)	1,000.2	225.0
2017년 보유세(만원)	225.0	33.1
2018년 보유세(만원)	336.3	39.6
증가율(%)	49.5	19.7

주: 1가구 1주택 가정. 실제 부과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세액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00284.html, 추연길세무사

3. 정책 제언

- 종부세 적용 기준,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조건도 삭제
 - 현행 종부세 기준 ‘공시지가 9억’은 주택시장 현실과는 괴리
 -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은 전국 1.09%, 서울 5.5%
 - 누진적 재산세 외에 징벌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종부세의 대상이 전체 가구의 1% 이상(단독주택 포함하면 더 증가)이라는 것은 종부세의 근본 취지에 맞는지 의문

2) 다양한 요소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추산.
 산식=2018년 종부세(9억이상 가구수* 구간 평균가격(10억으로 가정)*공시가격 증가율*종부세율(고정)) - 2017년 종부세(9억이상 가구수* 구간 평균가격(10억으로 가정)*종부세율(고정))으로 추정

- 다주택자에게도 상향된 종부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함
 - 정부 일각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기준을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6억원으로 낮추려는 주장이 제기. 하지만 이 경우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은 2.8%, 서울은 12.8%로 증가하며 종부세 취지에 미부합
 -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 적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감안할 때, 중복적 규제에 해당
 -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
- 향후 증세요인에 대해 지출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올해 세제 개편안을 7~8월에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 증세 부담을 특정계층에 집중시키는 소위 국민 '편가르기'식의 세제 개편은 조세 회피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집단 간 갈등 등을 통해 경제 전체적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III. 도시 숲,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작성: 김영현 연구원 ☎02-6288-0532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도시 숲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수도권·지자체에서 정책으로 입안,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다수 채택되고 있는 실정. 본고에서는 도시 숲 현황 및 지역·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도시 숲의 기대 효과를 검토하였음.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충녹지, 모바일 플랜터, 기존 숲 리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 숲 조성, 시민·기업의 참여 독려, 예산확보와 법제마련이 시급함

1. 서울 도시 숲 현황

○ 전국 도시 숲 현황(총 도시 숲 면적률)³⁾

- 전국에서 서울특별시가 21.9%로 가장 낮은 도시 숲 면적률을 보였고, 반대로 가장 많은 도시 숲 면적률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로, 71.6%를 차지 (산림청의 2015년 전국 도시 숲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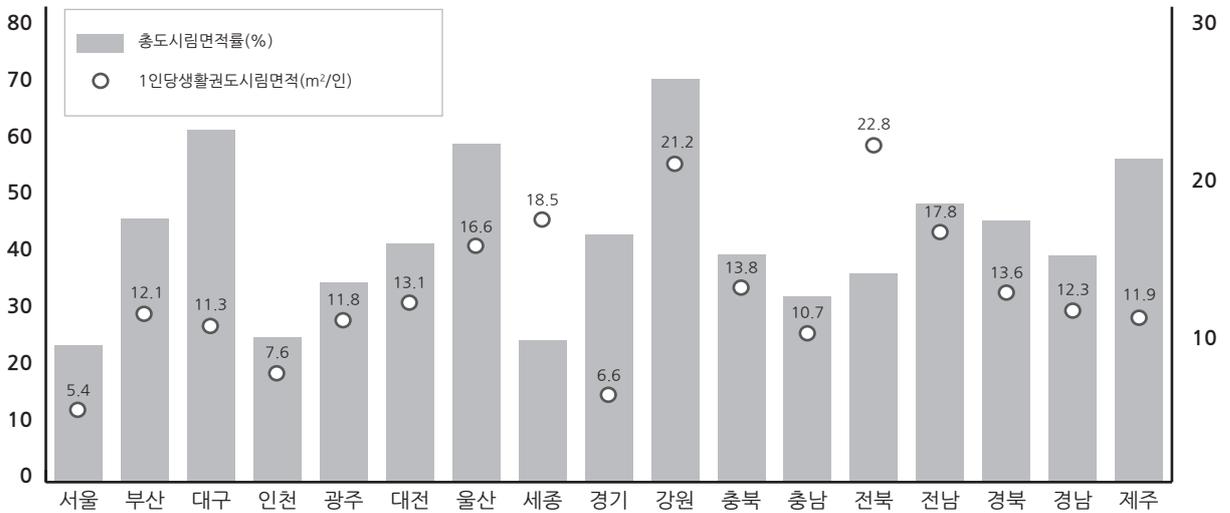
○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⁴⁾

- 서울 5.4m², 인천 7.6m², 경기 6.6m² 등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숲이 부족한 실정
- 특히,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은 런던 27m², 뉴욕 23m², 파리 13m² 등 선진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3) '총 도시 숲 면적률'이란 '총 도시 숲 면적'을 '도시 지역 면적'으로 나누어 퍼센트로 나타낸 값으로, 그 지역의 면적 중 도시 숲이 차지하는 비율

4) '생활권의 도시 숲 면적'을 '거주 인구수'로 나눈 수치

〈그림 1〉 전국 도시림 현황



출처 : 산림청 (2015년)

2. 다양한 형태의 도시 숲 조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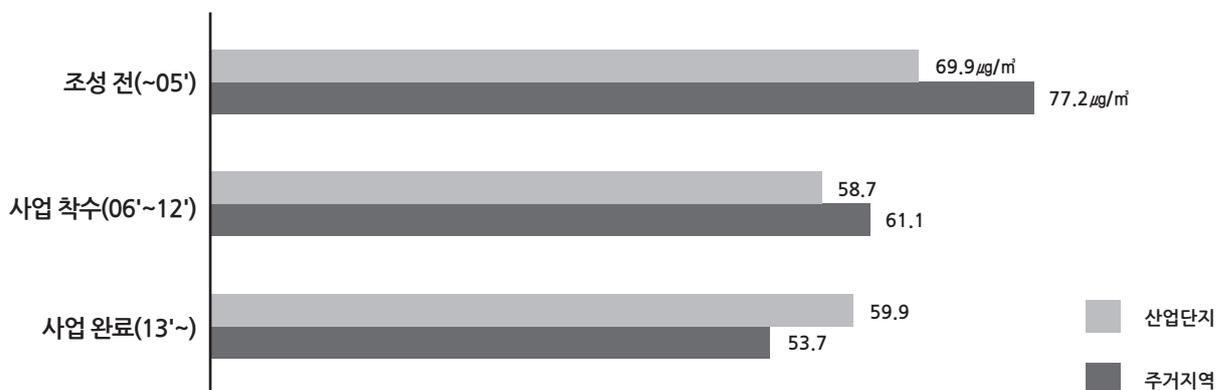
○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으로 주거지역과 분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 산업단지 일대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음

※ 시화 산업단지 일대 도시 숲(23만6000㎡)에 61억원의 사업비로 18만여 그루의 나무로 녹지 조성

· 도시 숲이 조성되기 전(2000~2005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9% 높았지만 도시 숲 조성 후(2013~2017년)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53.7 $\mu\text{g}/\text{m}^3$)가 산업단지(59.9 $\mu\text{g}/\text{m}^3$)와 비교해 12%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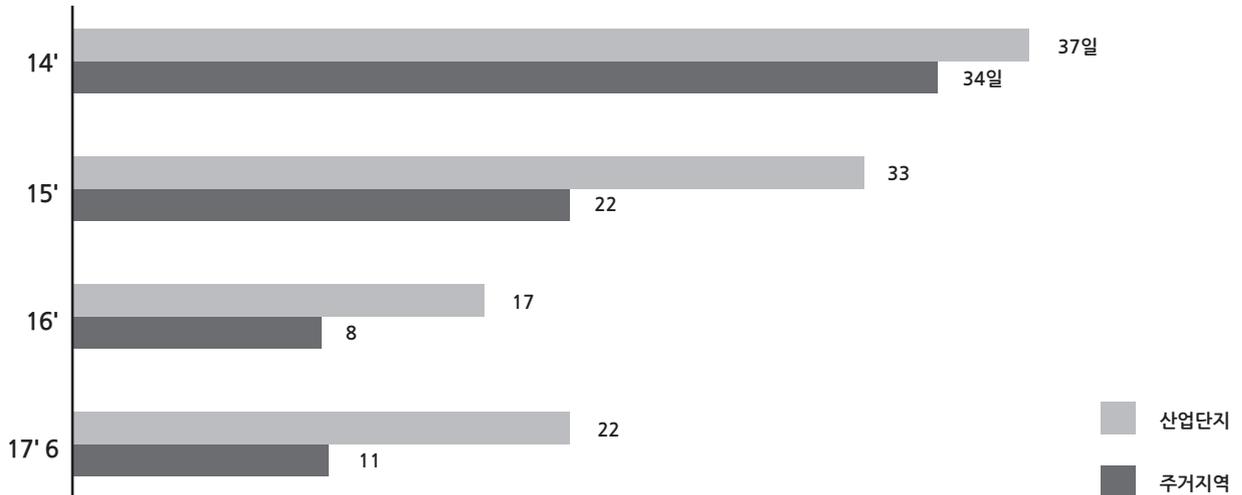
〈그림 2〉 완충녹지 조성 전후 미세먼지 농도 비교



출처 : 산림청

- 완충녹지 조성 후 최근 3년간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낸 날이 109일인 반면 주거지역에선 75일에 불과해 31%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완충녹지 조성 후 3년간 미세먼지 나쁨단계 발생일수



출처 : 산림청

- 지난 2월 시화 산업단지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5.9\mu\text{g}/\text{m}^3$ 일 때 주변 주거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1.5\mu\text{g}/\text{m}^3$ 로 약 17%의 차이를 보임

○ 모바일 플랜터⁵⁾로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 SK임업(주)가 자체개발한 모바일 플랜터를 조경수 유통사이트 트리디비 모회사 (주)헤니가 녹지시설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모바일 플랜터는 위치, 나무의 수량 및 규격에 구매 받지 않고 녹지 확보에 탁월하여 도심 속 미세먼지와 방진 저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강점
- 녹지환경이 취약한 산동네, 다가구 밀집지역,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모바일 플랜터를 활용한 녹지환경개선 사업 준비 중

○ 광주시청앞 미관광장이 도시 생태숲으로 탈바꿈

- 광주광역시에서 89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에 완공함

5) SK임업(주)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플랜터는 나무를 플랜터(이동식 화분)에 이식하고 IoT기술을 접목시켜 모바일로 수목의 생장을 관리하는 시스템

- 나무 4만723주를 심어 숲 조성, 잔디광장, 벽천, 계류 등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기존 광장의 저조한 이용률을 회복하고 웰빙 휴식공간 마련

<그림 4> 광주 미관광장의 녹지 조성 전후 모습



출처 : enews.gwangju.go.kr

3. 도시 숲의 기대 효과

- 도시 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열섬현상 완화, 소음감소, 시민 휴식 및 문화공간 창출, 도시환경미관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마다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는 도시 숲 조성을 통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음
 - 도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도심보다 25.6% 낮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40.9% 낮게 나타남
 - ※ 도시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조사 (국립산림과학원, 17.5.30)
 - ▷ 2017. 4월 서울 홍릉숲과 도심에서 부유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분석 결과
 - ▷ 부유먼지(PM10) : 도시평균 60.2 $\mu\text{g}/\text{m}^3$, 홍릉숲 42.4 $\mu\text{g}/\text{m}^3$ (∇ 17.8, 25.6%)
 - ▷ 미세먼지(PM2.5) : 도시평균 23.5 $\mu\text{g}/\text{m}^3$, 홍릉숲 13.4 $\mu\text{g}/\text{m}^3$ (∇ 10.1, 40.9%)
 - 숲 1만 m^2 는 미세먼지 46kg, 대기오염물질 168kg 흡수하는 효과
 - ※ 서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려면 축구장 2만 7000개 크기인 2만 1824ha의 산림이 추가 조성되어야 함

- 느티나무 1그루(옆면적 1,600m²)는 하루에 8시간 광합성 작용을 할 경우, 연간 (5~10월)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방출 (산림청)
- 도시 중심부는 열섬 현상에 의해 주변 지역보다 뜨거워지는데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 완화하고 습도는 9~23% 상승시켜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 플라타너스 한 그루의 냉방 효과는 15평형 에어컨 10대를 7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음
- 도시의 교통 및 기타소음으로 인한 소음감소
 - 산림청, 폭 10m, 너비 30m인 수림대가 있으면 7dB의 소음을 감소, 키 큰나무 (폭30m, 높이 15m)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0dB 소음 감소 확인됨
 - 도로 양쪽에 침엽수림대를 조성하고 중앙분리대에 키가 큰 침엽수를 식재할 경우 자동차 소음의 75%, 트럭소음의 80% 감소
- 바쁜 현대인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문화공간 제공
 - 대기오염지역, 삭막한 공터 등을 녹지로 조성하여 미관 및 환경을 녹색공간으로 개선시켜 시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마련

4.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숲

- 도시 숲의 혜택과 관련한 포럼 및 설명회 개최
 - 민간단체 및 기업의 도시 숲 조성 및 운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형 도심녹지 조성사업의 롤모델 마련
 - 실제 도시 숲 현장에서의 관측장비를 통한 산소공급, 열섬완화효과 체험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도시 숲 조성 참여에 직접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음
 - 광주푸른길공원과 같은 시민참여형 도시 숲 사례를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효과를 높여야 함

□ 완충녹지 형태의 도시 숲 조성이 바람직

- 산업단지, 철도역세권과 같은 오염 및 소음지역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주거지역과 분리시켜 미세먼지 완화 및 소음을 차단할 필요 있음
 -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는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부유먼지의 이동을 막아 주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
- 완충녹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겪을 대기오염 및 소음 피해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음

□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사유지가 많고 비싼 땅값과 인구 및 건물 고밀도로 인한 도심지역 특성상 숲 조성공간이 매우 부족
 - 도심광장, 역광장, 폐철도 부지 등 별도의 부지 물색이 필요 없는 공유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삭막하고 불필요한 공터 이미지를 개선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 재창출
 - SK임업(주)의 모바일 플랜터와 같은 자투리 공간 활용방안으로 녹지공간을 연출하여 숲의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 기존 숲의 리모델링 통해 생태적 기능 증대

- 전국의 기존 도시 숲의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 혹은 관리 소홀한 숲을 리모델링 시행
- 도시 숲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생태적 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
 - ※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 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공표

□ 삭감된 도시 숲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도시 숲 관련 예산은 2009년 944억 원, 2011년 834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697억 원(추경포함)으로 삭감되었으며, 올해는 668억 원으로 더 줄어든 상황
-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계획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안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시행할 필요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8-11)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종인 편집위원 : 김원표·이윤식 간사 : 김영현·김신의

발행처 : 여의도연구원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발행일 : 2018년 5월 3일 디자인 · 인쇄 : 원기획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